

# 석유세미나 종합토론 (全文)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 일시 : 1993년 11월 26일 (금)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사회 : 신의순 (연세대 교수)
- 토론 :
  - 오두현 (소비자보호원 부원장)
  -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 이희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강성철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 한준호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





**사회 (신의순) :** 저희들이 2시간에 걸쳐서 유가연동제 실시에 앞서 여러가지 준비사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두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플로어의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배병휴 논설주간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배병휴 :** 석유정책을 오랫동안 다루신 분이나 석유에너지 문제를 연구하신 분께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발표해주시는 이 주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충분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유가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주제 자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가제도개선은 그동안 여러번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일반 소비자들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연동제를 실시했을 때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고, 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유가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석유산업도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시점에 이르렀는데 현행 유가제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바꾸어야 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소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유가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석유류는 대단히 비싼 에너지고, 대단히 소비하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어느덧 석유는 공급이 매우 넉넉하고 값이 싸고 무한정 공급될 수 있다는 에너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도 유가제도 자체가 바뀌

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신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개혁시대인데, 개혁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한 시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경제활동에 깊숙히 개입하고 개입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정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간섭과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석유부분에 관한 한 정부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정을 쉽게 말하면 가능한 한 개입수준을 낮춰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유가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韓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정부는 금년 말까지 5개 정유회사에 손실보전책으로 7백억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유가제도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정유회사의 이익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빚을 지고 연말까지 손실보상 정책에 골몰해야 되느냐, 이런 제도 가지고는 에너지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유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골격에 대해서 하나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데 다만, 전면자유화 전단계로 내년 초부터 연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관심사항이 이것입니다.

유가연동제를 실시해서 석유류 값이 대폭 인상될 것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연동제가 성공할 수 있느냐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국제원유가격의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원가 요인인 원유가격과 공급이 넉넉하고 가격이 싸면 연동제를 실시해서 값이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값을 내리기 위해서 연동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소비자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대로 내년초에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석유류 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미리 연동제를 실시해서 내렸다가 대폭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우리와 같이 잘 모르는 소

비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해명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연동제를 거쳐서 전면 자유화로 가자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석유류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원가요인으로 보면 경쟁 제한적인 요인으로 제한시킨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금융비용이라든지 정제비용이나 수송비용 같은 것은 경쟁을 해서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오히려 공식적으로 제외시키고 연 1회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차별화시키지 않고 꼭꼭 묶어두고 원유는 도입비용이 쌀 수도 비쌀 수도 있고, 수송비용이 비싸도 이런 것을 단일가격으로 묶어 둔다면 쌀 원유를 도입해온 회사와 비싼 원유를 도입해온 회사를 다 같이 평균해서 반영시켰다는 것인데,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석유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기 위한 전단계로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면서 차별화시킬 수 있고, 경제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 묶어 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연동제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인데, 정부는 공식만을 제시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유화 해놓고도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행정지도할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동제라는 방식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부담을 안지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너무 부담을 저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고 소비자도 나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데, 그러면 정부가 공식을 제시하고 나면 실제 연동요인은 누가 산정해서 누가 적용하느냐, 업계에서 합니다. 협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누가 감시하느냐 이것이, 업계의 자율에 맡기면서 정부가 연동요인을 계산하는데 개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공식을 제시하고 나서 연동요인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때 무엇으로 감시하겠느냐 말이죠. 가만히 맡겨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세번째는 지금까지 저유가 정책이었는데, 저유가 정책

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가정책에 희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에너지산업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유가 정책이 나쁘지만, 그래도 물가안정이라든지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해 왔는데 유가정책을 바꾸면서 저유가 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일반 물가정책, 산업정책이 포괄적으로 정부내에서 검토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가정책 하나만 떼서 저유가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공자원부가 채택한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이 내년 초부터 정식으로 발진하게 되는 신경제 5개년계획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제 5개년계획의 발진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 정책은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유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물가정책하고 산업정책하고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정책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韓국장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적을 했는데, 석유류가격이 대중교통요금의 원가구성에 차지하는 것이 별 것이 아니다. 버스 10%, 택시 10% 안팎이고 제조업 2% 안팎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 2%가 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시는 것이지요. 대단히 큰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기름이 차지하는 원가 구성비에 산술적인 구성비 이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 엄청난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에 기름이 차지하지 않는 다른 분야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적지않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기에 때문에 가볍게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정책 쪽에서만 보는 단견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유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유가 정책이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억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서비스요금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묶어두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도 당연히 저유가 정책의 포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상공자원부 정책으로 커버하기 힘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는 뭐니뭐니 해도 소비자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혼란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매달 조간신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는 연동요금을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고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빠지는 것이니까 소비자들이 일일이 정유회사에 전화해 알아보든지, 석유 협회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업계 자율 이니까 정부에 대해서 석유 값을 왜 올려 줬느냐, 왜 내 리느냐, 이렇게 묻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유회사나 석유협회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소비자 앞에 검증이 안되고, 확인이 안되 연동제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름과 관련된 다른 요금들은 다 안정이 되어 있는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장기간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데 석유류만 매월 한번씩 조정이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거부반응을 무엇으로 흡수하느냐 말이죠. 석유 가격과 관련된 기타요금도 연동이 되는 것 같으면 수용이 되지만, 모든 요금은 6개월이나 1년동안 묶여있는데 석유요금만 석유업계의 편의를 위해서 변동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수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석유산업이 자율화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요금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요금정책도 완전자율화로 가는데 벽차니까 중간단계인 연동제로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부분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경쟁을 제한시키는 요인은 그대로 남겨두고 가격부분만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으로 맡기는 논리를 가지고 개방시대, 자율화시대에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정책목표와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 내세운대로 석유산업의 완전자율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의 행정개입과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시켜서 그중의 한 부분으로 석유가격의 연동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정부내에서의 정책이 수용되는 과정도 쉽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신의순) :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회적인 수용성이 사전에 파악이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제도가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단지 업계의 주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 제도가 가지고 올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토론은 소비자보호원의 똬두현부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두현 : 소비자보호원 부원장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를 토론회에 참석시켜 주신 것에 대해 한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소비자로서 평소 느끼고 또 업계나 정부에 바라는 바를 몇 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뜻에서 한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규제개선문제, 가격자율화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와 좋은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 느끼던 바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주문하고 싶은 것을 피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자율화든 또는 규제개선이든 제도개선의 의의와 목적, 바꾸어 말씀드리면 필요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기본인식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좋은 처방이 나오고 논쟁이 될 것이다하는 각도에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하신 정부당국이나 업계의 대표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제도개선이다, 유가자율화다, 이것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방화다, 국제화다, 물결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또 에너지는 특별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뭔가 예외가 가미되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같은 제도개선이나 개혁은 결국은 충분한 기대효과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형식적인 자율화나, 제도개선 차원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석유산업이면 석유산업, 또 석유부문의 유통업이면 유통업, 이러한 비지니스적 기업경영의 자율화에 기본목적은 두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능률과 경제적 효율, 소비자후생 또 소비자보호 내지 국제경쟁력의 강화, 체질개선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현재 방법 가지고는 안되겠으니까 역시 저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판단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출발해야지 좋은 제도와 해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오늘은 주제발표자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가지 사정상李文장님께서 총괄적인 정책방향과 석유산업의 동향, 전망을 폭넓게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유가연동제 쪽으로 주로 토의되고 있는데, 유가연동제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가 풀릴 수 없고, 또 뜻이 그 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제도개선 차원보다도 행정편의의 목적이나 또는 정유산업의 어려움을 조금 낮게 해준다는 차원 보다도 본질적인 각도에서 문제를 보고 해답을 구해야한다고 봅니다. 보다 더 포괄적이고 앞뒤 관계를 따져서 석유산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체계상에서 패키지로 문제를 보고 처방을 찾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독점이 아닌 비독점의 민간부문으로서 정부가 가격을 철저히 통제하는 품목은 특히 석유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개의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쌀값 그리고 석유값이 두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비독점이고 민간선택분야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원초적인 타당성은 인정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두 품목의 예를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정부의 관리방식과 정책이 과연 뜻이 있는 것이냐, 적어도 현재 내지 앞으로 상황에서 볼때 석유산업은 오히려 쌀보다 더합니다. 지금 원료구입 단계나, 제조단계, 유통, 수출입 모든단계에서, 인체로 비교하면 애기낳을 때부터 정부한테 임신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크면 한살 때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마디마디 통제를 받고 하는 양상인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스무살 성년이 넘고 삼십살이 가도 이렇게 갈 것이냐, 옆 동네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는 방식이 좋은 것이냐, 이것은 스스로 비교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정부의 유가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80년대 초입니다. 2차 석유위기 직후였는데, 그때를 회고해 보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32달러, 34달러, 36달러까지 뛰었고, 또 환율도 3, 4년간 6%씩 5, 6백원대 하던 것이 820원대까지 올라 걸잡을 수 없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때인데 그때는 그런대로 필요했고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프랑스다, 어디다, 이제는 80년대 초의 그런 위기 상황하고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돌이켜 보면 84년, 85년 이때와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유가관리나 규제 방식에 뜻이 있는 것이냐 해서, 일부 회의적인 느낌을 저도 가졌고, 그런분들도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정유사도 통계를 보니까 정제능력이 167만5천배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또 국제원유 수급상황도 별로 우려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등등으로 볼때 지금은 우리가 과감하게 개혁차원에서 또 국제화차원에서 또 국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제화와 관계없이 이것은 되기도 낡았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 내지 개혁과제 대상 범위안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규제 개혁 또는 자유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부에 계신 분한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소박한

느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단순한 가격통제에 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디마디 관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기업이 능률을 올리고, 제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격통제만 하더라도 가격통제를 하는 나라일 경우라도 하다 못해 주유소에 가면 1원이고, 2원이고 가격차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장에서부터 대리점, 주유소까지 차례차례 가격을 똑같이 하고 거기다가 마진까지 똑같이 그런 방법을 지금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늦게 하느냐, 또 단계별 전략으로 할 것이냐, 원샷으로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만, 대강 폭을 잡아 그 테두리 안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소비자로서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선 내용하고 유가 자율화의 시기를 언제쯤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드리면, 자율화의 요건 내지 경쟁력은 갖춰져 있으나, 지금 할 수 있다는 사람도 더러 있겠고, 아직 멀었다는 사람도 많겠고, 그럴텐데 그것을 완전히 갖추고 할 수도 있겠고, 거의 갖추어진 상태라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유사가 5사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일반산업 조직의 이름을 빌린다면 소위 제일 큰 기업이 특정시장에서 50% 이상을 점하지 않고 4개 다른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면 시장구조 측면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확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경우는 어느 회사가 70%의 마켓셰어를 갖더라도 참입 조건등, 모든 것이 아주 자유롭다면 그 시장은 그런 구조하에서 경쟁은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구조가 달라져서 수위사업자인 유공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 35%에서 60% 수준인데 그렇다면 기본요건은 갖추어진 셈이지요. 왜 그러나 하면 나머지 4사가 세가 조금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에서 조금 미흡하다고는 느껴집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입자유화 문제를 가지고 3년이고 5년 해도 결론이 안 날 것이예요. 그렇다면 한 두개 정도라도 참입을 빠른 시간내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든지 그것이 곤란하면 지금 5개 회사에 마켓셰어 그것을 증설이라는 정부의 칼자루로 조정해서 세어가는 쪽은 조금 더 증설을 용이하게 해주든지 하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증설을 너무 타이트한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용이하게 하면 시장구조 문제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부문의 자율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공장도에서 지금 형식상으로 휘발유 자유화했다 하는데, 그러면 공장도에서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라도 업소간 주유소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미세한 경쟁이, 예를 들어 서비스 가격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행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쪽을 제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빨리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정제나 제도단계에서 경쟁을 한들 유통부분에서 경쟁을 안 해주고 다 흡수해 버리면 소비자한테는 아무 뜻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결국 최종 타겟은 소비자고, 판단자도 소비자다 하는,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고 그 효과도 오도록 그런 뜻의 제도개선이나 자율화가 필요한 것이지 모양만 갖춘 자유화는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폴사인제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 여러가지 우려곡절을 통해서 다행스럽게 시행되었지만, 지금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겉에 포인트도 깨끗히 바르고, 또 주유소 갯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도 너무 늦게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Km 거리제한 할때도 좋황, 좌우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를 지을래야 땅이 없으니까, 빈땅 찾아서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사거리의 대각선으로 주유소가 있어야지 소비자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행선으로 가든 상행선으로 가든 거기 수요에 맞고 또 양쪽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있

어차 경쟁이 나는 것이지, 주유소가 한쪽 차선에만 있으니 결국은 급한 사람들은 중앙선을 위반하는 꼴이 나고 여러가지 교통문제, 불편문제, 경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면 우리가 역시 상당히 너무 장기적으로 내다 보지 못하고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유통기구는 업체가 무엇이 가장 능률적이고 이런 여건하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한테 좋은 유통시스템이 무엇이나 해서 자기가 스스로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접근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대리점을 두고 마지막 소매점인 주유소를 거칠 것이냐, 주유소만 해도 자기가 소유는 하되 리스로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독립된 주유소와 거래관계에서 할 것이냐, 또 정유회사가 직접 할 것이냐,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할 것이냐 또는 믹스할 것이냐, 이것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통조직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 대리점 프렌차이즈계약 하는 것도 1년으로 제한하고 하는데 그것은 주유소한테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요, 정유회사나 도매상, 대리점한테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발표자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 해주셨는데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또 장기간 해야 된다고 직거래를 하든 이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한 기업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풀사인하고, 자유화하고 경쟁한다고 그러는데 휘발유 같은 것은 차에 넣어도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 옥탄가를 표시해줘야 되지요. 85든지, 86이든지, 95이든 96이든지, 97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파는 사람 마음대로 고급이요, 보통이요 합니다. 하다 못해 곰탕집을 가도 하동곰탕을 찾고 우례옥곰탕을 찾고 생수만 해도 설악산 생수를 찾고, 지리산 생수를 찾고, 우리는 몇 십원

짜리 껌을 사도 롯데껌이냐, 해태껌이냐 알고 사고 그리고 소비자가 그것을 알고 내 마음에 든다, 기분좋다. 이렇게 식별해서 그래야 그것이 꺼꾸로 피드백이 되어 어느 회사, 특정회사가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지, 지금 뭐가 뭔지 누구 것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니까 아무리 자유화시키고 경쟁을 해도 잘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뭘 섞든, 불순물을 첨가 하든, 차만 굴러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터전에서 경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당장에 해야 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고 또 그것이 바로 경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다 문닫아 두고 모르게 하고 안하고 백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제품은 원유와 관련해서 연산품이기 때문에 어떤 예외를 많이 두고 어떤 특종은 빼고 넣고 하다 보면 그 전체를 보면 소비자 부담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또 현재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는 빚져도 10% 세후 이익 보전해주고 원유를 잘못 사와도 보전해주고 비싼 이자를 써도 보전해줍니다. 다만, 쌀하고 차이는 한계생산비로 뭘 하는데 이것은 평균생산비로 적용한다 뿐이지 오히려 쌀 보다 더한 것은 쌀은 재정이 어려워서 3% 밖에 안 해준다, 동결이다 하는데 이것은 꼭 시차는 있지만 10% 해주거든요. 완전히 빵장사조.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제를 하든 자율화를 하든 가급적이면 동시에 자유화 내지 연동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유종별 가격구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한번에 못 하더라도 짧은 시일내에 더 왜곡 시키지 말고 빨리 개선하는 쪽으로 단계별 접근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수출입 통제다, 각종 보고, 승인, 절차, 웬만한 것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꼭 필요한 것만 가져야지요. 기본발상에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화시기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조치를 하는데 길게 잡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짧게 잡으면 1, 2년이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동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직접 원상

으로 하든지 또는 두단계로 나누든지 해서 직접 자유화 단계로 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확실하지 않느냐, 연동제 잘못 해놓으면 또 현재와 같은 상태가, 옷만 신사복에서 청바지로 바뀌 입고 또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가 연동제 문제에 대해서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자 康부회장과 韓국장님 말씀이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유가연동제는 운영여하에 따라서 유가자율화 단계의 과도기적 조치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잘못 하면 아무 뜻이 없는 모양만 바뀌지는 결과 밖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가를 언제 조정할 것이냐, 시기선택문제로 관계기관간에 토의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마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을 없애고 공식에 의해서 하나씩 그런 이점, 또 업계로 보서는 가격이 상승단계에서는 빨리 빨리 그 비용이나 이익을, 몫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인하단계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비자나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과도기적 조치로 하려다 보면 더 자율화에 준하는 내용과 형태와 방법으로 그렇게 연승단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제가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프타 가격을 해봐도 그렇고, 실제 연동제 해놓으면 결국은 정치적인 유혹, 여론의 유혹을 받아서, 공식에 의해서 해야 될 시기에 못하게 될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한테는 시차문제지 부담은 마찬가지로 뜻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연동제는 아주 가격자유화에 접근하는 모양새로 해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연동비목도 불필요하게 복잡할 필요없이 가급적 꼭 필요한 것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할수록 더 좋겠어요. 자율화의 연속단계로, 정부가 사후적으로 리포트를 받으시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업계에서 공식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동제 하셨지만, 제가 깊은 검토는 없어

서 자신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했던 연동제와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연동제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가격자체만 컨트롤하고 가격도 단계별로 차례 차례하는 뜻의 컨트롤이냐, 그렇지 않으면 최종소비자가 가격 단계든지 공장도 출고가 가격 단계든지 길목 하나 잡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나머지는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것이냐 한다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와 조금 다른 개념의 연동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소비자의 우려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행제도를 급작스럽게 바꿀 때에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오고, 또 여기에 적응하는데 힘들고, 굉장히 적응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길들여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셨습니다만, 그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석유나 휘발유제품, 경유 이것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천만원짜리 넘는 자동차도 사쓰는 것인데 그것 가격통제 안하고 아무나 팔고 해도 올리고 내린데서 누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이유가 있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고, 부담도 되고 불쾌는 하지만, 이해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유없이 부당하게 누가 독점해서 횡포부리고 이런 것은 용납을 안하겠죠. 그것은 정부가 감시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걱정이 돼서 제도를 못 바꾼다, 이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소비자로서 현행 유가정책 및 제도와 관련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대부분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행제도는 정유산업 내지 정부가 정유산업에 보호 내지 육성, 물론 뜻이 있지요. 또 정부의 행정편의 이것도 뜻은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는 그 뜻이 있고 타당하겠지만, 소비자시각에서는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큰 뜻이 없지 않느냐, 이런쪽에서 불만이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제원유가가 오르면 틀림없이 완충을 하든, 비축을 쓰든 그것은 그래봤자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원유가가 내리면 소비자는 당연히 제품가격이 내릴 것을 기



대하는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교통대책이다, 무슨 환경대책이다, 또는 세수확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리지 않고 그 세금을 관세로 올리든가 또는 특소세로 올리니까 소비자는 불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특소세 세수 문제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정부에서 하려면 아예 앞으로 1, 2년이고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유가를 유종별로 국제시장 가격구조에 가급적 맞춰서 유가구조를 개편 내지 개선을 하고, 세수 확보나 또는 특소세에다 붙일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휘발유면 200%든, 300%든 붙여놓고 그 기본틀하에서 국제원유가가 오르든지 환율이 오르면 오르면 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있다가 내리면 느닷없이 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좋겠다고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후에는 원유가변동이나 환율, 팩터만 바뀔 때만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여 소비자는 당연히 내리면 내리고 오르면 올려도 아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 주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수박값이 경우에 따라서 두배로 오르고 세배도 오르고 배추값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니까 그것은 아무 불평할 수 없고 불만은 있겠지만, 시비는 정부에나 어디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업계나 정책당국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당국에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李文장님과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정부의 물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이런쪽에서 이제 정책당국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석유에 대해서 특정기관이 매달리는 그런 인상이 됐는데,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인이 할 것은 최대한 맡겨 버리고 정부가 필요할 것,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자원개발이라든지 경쟁유지촉진, 시장감시, 시장정보, 또 환경내지 소비자보호 이런 큰 테두리에서 정부가 감독하고 감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이윤이 적네, 많네, 빛을 갠네, 못하네 이런것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부나 업계에서 이제까지는 공급자 내지 정부 편의중심에서 또 부담해소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역시 소비자를 의식하는 각도에서 제도나 시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율화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멀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석유사업법 15조는 폐지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그런 조항이 있으면 유혹이 있어서 또 하게 되는데 정히 필요하면 다시 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니까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가지 규제완화다, 가격통제해제다, 여러가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험을 보면 그렇게 우려하던 것만큼 해놓고 나서 그렇게 부작용이 크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데는 필수적으로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최소한 범위안에서 지해를 짤면 된다고 보고 소비자가 무섭고 부작용이 무서워서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신의순) :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서울시의 수도값이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60%인가 한꺼번에 올리겠다고 신문에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신문에서 비판하니까 그것이 며칠 있다가 그냥 없는 것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신문을 보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5천억원인가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발표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효과가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소비자들도 그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측면에서 수도물값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 하는 식으로 설득을 했으면 오히려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裴주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지금 吳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우리나라 유가제도 자체

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정유업계의 애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민에게 비추어질 경우에는 그 원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세미나가 매년 계속됩니다만, 제가 몇년전에 참석했을 때는 그때의 정유산업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유가자율화라는 것도 결국은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다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유가연동제의 실시를 앞에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점들을 열거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생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두분 토론자께서 여러가지 지적이 계시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가 자유화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앞서 康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나 또는 韓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하는 그점에 각별히 유의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은 빼고 몇가지 제가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플로어에서도 질문내용을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즉각 유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가연동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裴주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정부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업계에서 가격의 상황, 상

승 또는 하락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어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의 결정은 어떤 제삼자,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러한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연동제는 결국 유가자유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언제 유가를 자유화하느냐, 유가연동제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국제경쟁력의 회복 또는 대외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전에 지금 닦쳐있는데 언제까지 유가자율화를 끄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유가연동제를 실시한 후에 그 다음에 91년부터 유가자유화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유가연동제를 실시해야 되느냐, 유가연동제 그자체는 가장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가연동제를 5년, 10년 끝바에는 아까 吳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제도내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문제점들이 개선이 됐을 때 바로 유가자율화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뭐냐하면 결국은 가격구조가 왜곡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유가변동요인이 제대로 가격구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구태여 유가연동제로 가지 않더라도 바로 유가자유화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연동제를 내년상반기에 실시하기 이전에 우선 왜곡된 가격구조를 조정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왜곡된 가격구조 자체를 안고 내년에 유가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자체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여건이 성숙했을 때 완전한 유가자유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여

건이 빨리 성숙이 되도록 협조를 하고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康부회장님께서 유가연동기준으로서 실도입가격을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유도입 가격을, 실도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유도입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아무래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도입 측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은 최소한 비싸지 않도록 원유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도입가격을 단순히 실도입가격으로 의존할 경우에는 그런 요인이 약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도 가격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유가를 인상하는 방안 또는 아까 특별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유가를 인상하는 방안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업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요. 정부의 세금으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계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장도 가격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면 원가를 올리느냐, 공장도 가격을 올리느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도도화나 환경오염방지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적절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드리겠다.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가연동제 자체가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 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유가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고 유가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수급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연동에 연연하게 되면 국내의 수요변화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또 국내의 공급여건도 반영이 되지 않고, 단지 국제적인 공급 측면에서의 변동요인만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시장가격이라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연동제는 어디까지나 유가자유화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로서 생각을 하고, 너무 거기

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유가연동제입니다만, 결국은 정유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율화를 촉진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대외경쟁력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가연동제다, 유가자유화다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정부에서 업계에 어떤 혜택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결국은 권리를 주는 대신에 업계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변화해야 되지만,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업계 스스로도 지금까지는 정부의 보호 또는 규제하에서 그나마 최소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습시다만, 앞으로는 경쟁에서 지면 결국은 회사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꼭 유가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업계에 도움을 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업계에 새로운 자각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로서 이 제도가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세분 발표자들께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 오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철 : 세분께서 좋은 비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申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동제 실시 필요성에 대한 접근방법을 좀더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개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미나가 그렇습니다. 저희

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협회세미나에 연속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것입니다

우선 작년 세미나만 해도 국제경쟁력 강화문제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2천년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했고 그때에 우리 석유산업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한 문제가 논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때 유가자유화문제도 나왔습니다. 연동제도 다 나왔던 문제인데 그 필요성은 그 당시에 다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언급을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연동제 실시를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이번 토의가 상공부 입장에서 볼때는 제도의 일대 전환을 앞두고 공청회 성격을 갖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제와 자유화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외개방과 자유화 추세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유는 우리가 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외원가가 오르는데 국내가는 그대로 묶어둔다 하는 것은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절감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원유비와 정부부문을 포함하면 약 85% 이상이 됩니다. 어떤 유종이 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90%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제비는 아무리 줄여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경영개선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가격인상이나 연동제 같은 것을 주장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벌써 옛날에 다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이미 다 이해하신 줄 믿고 유가자유화 전단계로 유가연동제 실시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화가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가져 오게 됩니다. 가격구조가 왜곡된단든지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원단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유가 안정공급 우선정책 때문이며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원단위도 일본에 비해서 2.5배 내지 3배 가까이 우리가 더 높습니다. 이와같이 해가지고는 경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유가유지를 바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오히려 소비자에게도 손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바라며

앞으로 연동제 실시단계에서 대국민설득과 홍보는 저희가 집중거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가를 결정할 때 매월 단위로 석유협회에서 공식에 의해서 결정하면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격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오해소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석유 협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면, 인위적으로 그랬다면 이것은 당장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해할수 없는 행위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고수세서 지적하셨듯이 소비자가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정부가 여기에 관여하여 정부와 업계가 공동참여해 달라고 진작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유도입 가격을 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종 유사가 싼 원유를 들여 올리는 비용절감 유인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유 5사가 FOB가격으로 한달간 들어온 것을 전부 합하여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평균치를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 보다 싼가격으로 들어온 회사는 분명히 득을 봅니다. 비싼가격으로 들어온 회사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다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가구조 조정방법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특소세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장도가격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잘못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재무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공장도가격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요령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특소세를 가지고 정부에서 세입으로 1조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면 그 1조는 변함없고, 이것은 이미 국민이 다 행복한 사항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장도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전혀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리없이 조정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배주간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계에서 연동제를 실시한 것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발표할때 정유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자꾸 불멘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사회가 납득을 안하고 국민이 납득을 안하는 이런 것을 어디 정유업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기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 내리고 올릴 때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전인수격으로 내릴 때는 경직성이 있고 올릴 때는 융의성이 있다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소비자들이 납득을 안할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감시자로서 감시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두현부원장님께서서는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책까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더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화시기를 원상으로 하면 어쩌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상으로 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나 주변의 여건이 전혀 적응 혼란이 안되어 있고 만약 현재대로 해가지고 자율화를 한다고하면 우리 정유업계간에도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또 유가구조가 현재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화해가지고 현재 국제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면 어떤 혼란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유가 제도를 30년 가까이 써왔기 때문에 다만 몇년간이라도, 1년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얼마간이라고 조정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무리없이 자유화로 들어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유가연동제가 과도기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화에 들어가기 위한 연승단계로 연동제를 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준호 : 시간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또 플로어에서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裴주간님 아까 말씀이 가격관리를 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 분명히 바로 잡을 것은 아까 우리 뚝부위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100% 손익보장을 해주니까 지금 아직도 7백억을 갚아줘야 된

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7백억원은 손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난 90년 걸프사태때 유가를 올려야 되는 것을 안 올림으로 해서 석유사업기금에서 원충해주는 제원, 그 다음에 작년 6월25일 우리가 유가를 조정할 그전까지 석유가격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줘야되는 손익하고는 관계없는 7백억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0%, 지금현재 우리가 10% 보장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10%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는 10%만 하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받아오고 그런 것 같으면 반대로 10% 안됐을 때는 정부가 손익을 보장을 해주느냐 하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康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 1000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裴주간님이나 뚝부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연동제를 빙자하여 정부가 자꾸 값을 올리고 정유사만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객관적인 공식에 의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서 정유사만 보호육성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연동제를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지고, 정유사 역시 자유화에 대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연동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실시하겠느냐, 왜 내년에 실시하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裴주간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현재 유가가 상당히 약세입니다. 약세고 그래서 지금 OPEC도 지난 11월23일날 OPEC총회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비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들어 갔을 때는 이라크의 수출금지가 어떤 형태로든 풀리지 않겠느냐,

풀리면 아무래도 유가는 약보합세를 유지하지 강세 쪽으로 가는 것이 않을 것이라는 관측하에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전후해서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연동제를 실시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유가가 상당히 떨어져 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다음 연동제의 가격, 아까 康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가격결정 방식을 정부가 정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 업계가 자율로 결정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모든 것은 실적을 대입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식만 정해 주고 그 공식에 의해서 협회 내지는 업계가 제대로 하는지 간접적인 감시만 해나가도록 할 생각인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여기에 계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하든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바꿀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그동안 저유가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라든지 산업쪽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연동제를 함으로 해서 저유가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저유가정책의 포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연동제에 들어가면 기획원,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자꾸 올라가는 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만 1년 통털어 봤을 때 국제원유가가 별 변동이 없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의 한두달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康부위원장님 역시 정부에도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경험있게 다루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하였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율화시기를 앞당기고 연동제시기는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유업계는 정유업계대로, 그 다음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申교

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동제 기간을 하나의 지나는 과정이라 생각하지, 이것이 지금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간을 줄여서 자율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자율화 쪽으로 나가면 가격만 자율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원장님이 지적하신 정부규제는 대폭 완화를 시키겠습니다. 대폭 완화를 시켜서 정부가 개입을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사회 (신의순) : 지금 질문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까 토의사항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韓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실시방안 중에서 유종간 가격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유종간 가격결정은 정부의 산업정책 물량정책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가연동제하에서도 현행대로 유종간 가격구조가 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이은상씨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韓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한준호 :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종간 가격구조가 국제가격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연동제 실시때 경질유와 중질유간의 가격차이, 그 다음에 고유황, 저유황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폭을 좁히고, 그 다음에 연동제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접근을 시켜 완전 자율화가 됐을 때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일단 접근을 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 (신의순) : 또 하나 유가구조 및 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유사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대리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유가구조 개선시기 및 기준유가구조 그리고 두번째는 공장도가격 구조개선과 병행한 세제개선 조정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번째는 유통마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현대정유의 신용봉씨가 질문해 오셨습니다.

한준호 : 지금 큰 제목인 정유사, 소비자 그 다음에 대리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계획은 무엇이나 하시면서 유가구조 개선시기 및 기준유가구조에 대해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하겠다고 말

씀드리고 구조개선시기는 연동제를 실시할 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동제를 실시할 때 일부분 걱정수준에서 산업에도 피해가 안가고 소비자한테도 큰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해 나가면서 계속 꾸준히 조정을 시키면 우리가 자율화할 시점에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일단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도가격 구조개선과 병행한 세제개선 조정 방향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앞의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제는 현재 특소세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휘발유가 109%에서 150% 되고 경유가 9%에서 20% 되는데 법이 지금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고, 공장도가격 구조개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유가 구조개선을 할때 공장도가격에 손을 대서 기준유가 구조가 개선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마진개선은 지난 11월 15일 6대 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이 완화되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첫날, 이튿날 받은 것이, 잘 아시다시피 3천2백개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주유소가 잘되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하나도 올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실적을 분석해 보면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마진이 적은 수준입니다. 현재 유통마진은 86년도부터 계속 거치를 해오다가 작년에 일부 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리점 및 주유소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봐서 지금 현재 몇%, 이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유사가 지금 유통부분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환수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유통쪽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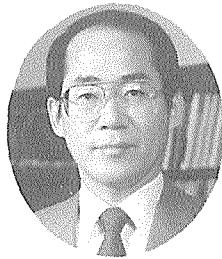
**신용봉 :** 추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유가연동제 실시 이전에 유가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든지 유통단계의 마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韓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유가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준시점에 기준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원가구조가 평균원가 개념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인 원가나 평균원가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시장경쟁과 설비경쟁에만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원가구조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기준시점에 기준원가를 산정한 방식에 있어서 연구원이나 정부는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희성 :** 우리는 표준원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것이 평균비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포물리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상에 생긴 결과이지 평균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만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장 한계에 놓여

있는 회사에 비용이 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이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계비용의 회사가격이 가격으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따라서 표준원가라는 것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공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쓰고 있는 평균 비용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자의적이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균비용에 근거한 유가결정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없겠느냐,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없겠느냐 하지만, 제가 봐서는 거기서도 움직여 봐야 나올 수 있는 개선의 효과라는 것은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비용에서 벗어나 유가구조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가연동제라는 것은 정부가 평균비용에 기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가격결정의 시점 뿐입니다. 과거에는 1년마다 한번 했고 또는 2년 지나다가 한번 한 것을 정기화한다는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경쟁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